

북한 IT, 소통과 평화의 가능성과 한계

강진규 NK경제 기자

목 차

- I. 머리말
- II. 북한 IT 현황과 남북 화해 협력에서의 역할
- III. 북한 IT 역량과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
- IV. 남북 IT 소통, 협력의 한계와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남북이 IT를 기반으로 소통, 평화 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계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했다. 하지만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다른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됐다. 이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으로 남북은 분단을 넘어 반목과 대결을 하게 됐다. 남북은 수십 년 간 총칼을 겨누고 대립했지만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추진했다.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1991년에는 UN에 동시 가입했다. 2000년에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개성 관광이 진행됐으며 남북이 공동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DMZ 지뢰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으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도 강화됐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갈등이 첨예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분야별로 남북 화해협력과 소통을 위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그중 IT는 그 자체로써의 협력 뿐 아니라 남북 가교 역할은 물론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T기술은 정보의 전달과 연계, 소통의 도구로 발전해왔다. IT는 기술을 넘어 문화, 사회, 경제와 융합되고 있다. 한국은 IT를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했으며 2012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후 IT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IT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남북의 공통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통일방안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켰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로 보고 있다. 우선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 통일의 과정(3단계)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사진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출처: 통일부

IT는 남북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은 IT 기술로 교류 협력 과정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의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협력 시 단순히 인적 교류나 학술 교류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원격강의, 모바일 강의를 활용하고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 매번 만나지 않더라도 학술교류를 할 수 있다. 남북 의사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 학술 세미나를 1년에 1~2번 한다면 온라인 세미나로는 5~6번 수시로 할 수도 있다.

또 남북연합의 경제적 공동체 관점에서는 남북 기업인, 청년, 개발자 등이 IT를 매개로 공동 벤처기업을 만들고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남북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인터넷, PC,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은 사회,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사회,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IT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IT 분야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수십 년 간 지속된 남북 대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남과 북이 IT를 기반으로 소통과 평화 체계 구축을 추진할 때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I. 북한 IT 현황과 남북 화해 협력에서의 역할

인류는 농업, 산업을 넘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아날로그적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지식경제, 디지털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며 컴퓨터와 통신이 모든 사회활동의 중요 수단이 된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전반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 네트워크 외부의 사람

들이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보격차의 개념을 도출하게 됐다.¹⁾

한국 사회에서도 스마트폰, PC, 인터넷 등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모든 사회생활, 경제 활동에 IT가 작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스마트폰 메신저로 소통을 하고 회사에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으며 경제활동을 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도시와 농촌, 신세대와 구세대의 정보화 역량의 차이가 소통의 부재를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는 정보 격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보유 현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그리고 인터넷 이용 능력 등을 조사해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정보화역량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취약계층의 활용 능력은 65.1%로 나타났다. 노년층이 58.3%, 농어민이 64.8%, 장애인이 70.0%, 저소득층이 81.4%으로 측정됐다.²⁾

정보화 수준은 세대별로 격차가 크다. 19세 이하가 114.7%, 20대가 127.8%, 30대가 123.9%로 10~30대는 정보화 이용에 대해 친화적이다. 반면 50대는 86.2%, 60대는 63.9%로 정보화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부격차, 사회 및 경제 활동의 격차는 세대, 분야별 갈등을 야기한다. 정보화 역량이 부의 창출, 사회적 활동 범위에 영향을 주면서 IT 격차는 사회적 격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인터넷, 모바일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진행할 때 IT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직접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격차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다. 남북 IT 격차는 남북 소통의 문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IT 격차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2017년 북한 이탈주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9.1%로 나타났다. 노년층이나 농어민, 장애인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세부항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가구는 59.4%로 일반 국민 보유율 82.6%에 비해 크게 낮다. 여성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55.8%로 남성 69.5%보다 낮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북한 이탈주민 가구는 66.5%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40대 가구는 44.3%, 50대 이상 가구는 39.7%만 PC를 보유 중이다.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컴퓨터 보유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이다. 2017년 북한 이탈주민 중 모바일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74.7%로 일반국민 88.7%에 비해 14% 낮다. 북한 이탈주민 가구 중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것은 81.3%로 일반 국민 91.9%와 비교해 10% 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패쇄적인 북한의 IT 환경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통제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컴퓨터, 스마트폰 보급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북한은 IT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8년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후 북한 내 이동통신 사용자는 5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등 대도시는 물론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1) '북한식' 정보화에 관한 연구 : 정보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박문우,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년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북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있다. 또 물건을 주문, 거래하는 경제적 활동과 평양과 지방의 업무를 위한 소통도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IT 변화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2> 북한 잡지 금수강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등장할 정도로 북한 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2018년 9월 24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라고 강조하면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³⁾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라고 말했다며 여기에는 부강한 국가건설이 과학과 교육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과학과 교육의 발전에 튼튼히 의거할 때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수 있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과학기술, IT 기술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연

스럽게 컴퓨터, 스마트폰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9월 2일 올해 들어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망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⁴⁾ 노동신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북한 내 2200여개 기업, 기관들이 과학기술전당의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새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전국 거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과학기술전당의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보급망을 사용이 약 10만 건에 달하고 있다.

또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올해 7월 2일 지난 3년 동안 북한에서 원격교육(인터넷 강의)이 확산돼 수천 개 기업소와 수십 개 대학이 연계한 원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수강인원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⁵⁾

북한의 원격교육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컴퓨터 뿐 아니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도 원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남북 정보화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스마트폰을 접하는 것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과 북의 청년들이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남북 IT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그만큼 사회 갈등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정진 박사의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2018년) 논문에는 따르면 정보격차는 통일 한국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⁶⁾ 이에 이동통신의 협력이 남북한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은 단순히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I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화해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다. 지난 수십 년 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화해,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를 잘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줄어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남·북 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과반이상으로 나타났다.⁷⁾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진술에 53.0%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또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진술에도 50.3%의 국민이 찬성했다.

과거에 통일은 민족의 과제이며 숙명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반면 지금은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

남북이 소통 없이 수십 년을 지내면서 같은 민족,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보다는 다른 나라를 보는 것과 유사해 진 것이다. 오히려 북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고 있다.

3) 2018년 9월 25일 NK경제 기사

4) 2018년 9월 3일 NK경제 기사

5) 2018년 7월 2일 NK경제 기사

6) 이정진,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년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

7) 2018년 8월 6일 오마이뉴스 기사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상호 소통과 교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은 통제사회, 폐쇄사회로 전면적인 교류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 대안으로 IT를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금강산, 백두산을 가보고 개성과 평양에 가보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인원만 갈 수 있다면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북한 명소와 조선, 고려시대 유적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남북은 개성 만월대를 발굴하고 있다. 2015년 10월 고궁박물관에서 개성 만월대 발굴 관련 전시회가 열렸는데 전시회에는 입체영상 등으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⁸⁾ 반대로 한국의 한라산, 경복궁 등을 VR로 북한 청소년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줄 수도 있다.



<사진3> 루트가르도 바르보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필리핀 민주주의 인민권력당 대표단이 7월 19일 북한 평양교원대학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參觀했다. 루트가르도 바르보 부위원장은 북한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이용한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출처: NK경제

앞서 설명한 원격교육 분야에서 협력도 가능하다. 남북이 정치적 요소가 없는 물리, 수학, 화학 등을 시작으로 공동으로 인터넷 교육 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남북 교육자들이 모여 교육 내용을 정하고 남북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남북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 교육당국이 공교육 차원에서 무료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나아가 한국 민간 교육기관과 북한 교육기관이 협력해 유료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교육을 중시하는 북한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 외화벌이 사업을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상봉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다. 대안으로 IT 플랫폼을 만들어서 남쪽의 가족이 북한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 북쪽의 가족이 남쪽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다. 플랫폼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통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8) 2015년 10월 13일 뉴스1 기사

나아가 중간에 IT 플랫폼을 두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연구개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미 IT가 발전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중국에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과 일본 기업인이 문서를 공유하는 방식이 일반화 됐다.

남북이 각종 협력을 추진할 때 모두, 매번 만나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향후 남북 화해가 고도화 단계에 간다면 서울에서 평양으로 차를 타고 가서 회의를 하고 부산에서 원산으로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갈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IT 기술로 협력을 할 수 있다.

남북 화해협력 홈페이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남과 북의 인원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내에서 화상 회의도 하고 문서를 공유하고 정보를 요청하고 토론도 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씩 소통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동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남북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된다.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남북 협력 플랫폼 인프라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면 된다. 관리의 민감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립적인 제3국에 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을 남북 사이에 적용할 수도 있다. 남한 고객이 북한 송이버섯을 구매하기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남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IT로 간소화할 수 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중간에 구매, 결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클릭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받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남한 고객들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을 각 분야별로 적용하면 남북 화해협력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남북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각 분야별로 협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복원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과학기술 공유, 원격교육 등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III. 북한 IT 역량과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딱 구분해서 나눌 수는 없다.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이 동시에 추진되고 다시 남북연합과 통일국가 논의가 겹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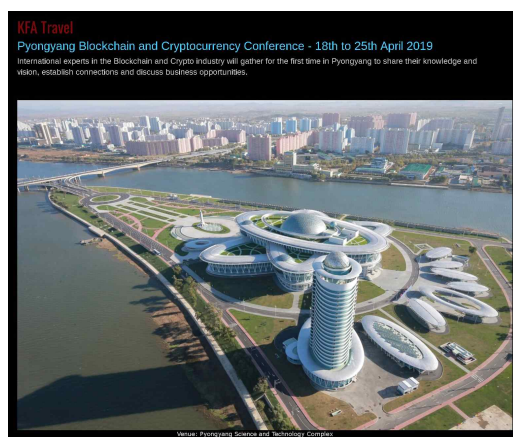
화해협력을 하는 동시에 남북연합을 만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북한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IT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이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년 제63권 제4호에는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확립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 요구’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이다. 첨단기술산업이 지식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첨단기술산업의 힘에 떠받들려 지식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했다.⁹⁾ 북한은 자국의 경제산업 구조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I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에 대해 북한도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 기업 조선엑스포는 2016년 이미 비트코인 거래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으로 대외사업을 진행했다. 또 북한은 2018년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¹⁰⁾



<사진4> 조선친선협회가 공지한 북한 블록체인 컨퍼런스 소식 2018년 10월 개최 소식(왼쪽)과 2019년 4월 개최 소식

북한은 해외 친북 단체인 조선친선협회(KFA)와 몰타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스토퍼 엠스 토큰키(TokenKey) 대표 등에게 블록체인 컨퍼런스 준비를 의뢰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들은 해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동향에 관심이 많으며 북한 기업과 해외 기업의 협력도 원하고 있다. 당초 행사는 10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른 행사 일정 등으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리고 최근 조선친선협회는 NK경제에 2019년 4월 22일과 23일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¹¹⁾ 북한은 블록체인 기술과 비즈니스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블록체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는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한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 방침이며 서울시는 블록체인을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런 남북의 공통적인 관심이 겹쳐진다면 협력을 넘어 합작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

스위스 주크주가 블록체인 특구인 크립토펙리로 불리는 것처럼 개성이나 원산에 블록체인 단지를 조성해 남북 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 남북이 문서를 주고 받을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남북 금융 통합의 기초 단계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디지털화폐를 만들 수 있다. 화폐 통합은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의 화폐를 흡수 통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매번 환전을 하는 것은 교류협력 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9) 2018년 6월 7일 NK경제 기사

10) 2018년 8월 22일 NK경제 기사

11) 2018년 11월 21일 NK경제기사

디지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그 디지털화폐를 남북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남한 돈과 디지털화폐를, 북한에서는 북한 돈과 디지털화폐를 사용한다. 이는 화폐 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인공지능(AI) 기술이다. 북한은 과거 은별바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인공지능 기술을 음성인식, 문자인식, 공정효율화, 게임 등 다방면에 적용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62권 8호에 ‘음소음성인식에서 심층신뢰망을 이용한 한 가지 음향모형화 방법’이라는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딥 벨리프 네트워크(Deep Belief Network, DBN)’를 음성인식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논문에서 북한 연구진은 딥러닝의 창안자인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문뿐 아니라 실제 적용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2017년 11월 17일 북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된 여러 가지 식별 및 인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광에 따르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28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에 수십 여종의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들이 출품됐다.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대학은 어휘 음성인식기 룡남산 5.1를 선보였다. 사용자가 글을 읽으면 문자로 인식해주는 기술이다. 서광은 기술적으로 부분 공간 가우스혼합모형에 기초해 음성인식률을 개선했으며 음성인식 정확도가 98%, 인식속도는 초당 6자라고 설명했다.



<사진5> 북한의 인공지능기술 전시장 모습

11월초 북한이 개최한 제29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에서도 AI가 화두가 됐다. 북한은 전시회에서 얼굴식별프로그램, 음성인식프로그램, 기계번역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열었다.¹²⁾

얼굴식별프로그램 경연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가 1등을 차지했으며 음성인식프로그램 경연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대학 지능기술연구소가 1등을 수상했다. 또 영어-한국어 기계번역프로그램 경연에서는 평양정보기술국이, 중국어-한국어 기계번역프로그램 경연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 적용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을 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6> 2018년 11월 2일 노동신문 톱 기사로 다뤄진 인공지능 소식

인공지능은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할 정도로 일상화 된 이슈가 되고 있다.¹³⁾ 2018년 11월 2일 노동신문은 5면 톱 기사로 인공지능기술 개발 성과 소식을 다뤘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신문은 11월 14일 ‘인공지능이 직면한 도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윤리문제도 지적했다.

인공지능은 남한에서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스마트공장을 만드는데 쓰이고 스마트시티의 두뇌가 될 것이다. 또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인공지능 비서가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뿐 아니라 북한은 증강현실(AR)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9월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가 지능유희사관 ‘모래놀이’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기는 모래판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AR 교육, 놀이기구가 소개된 적이 있다.

또 2017년 11월에는 룡라도정보기술사는 증강현실(AR)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신비경을 만든 사실이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솔루션을 보고 전국 유치원에 보급할 것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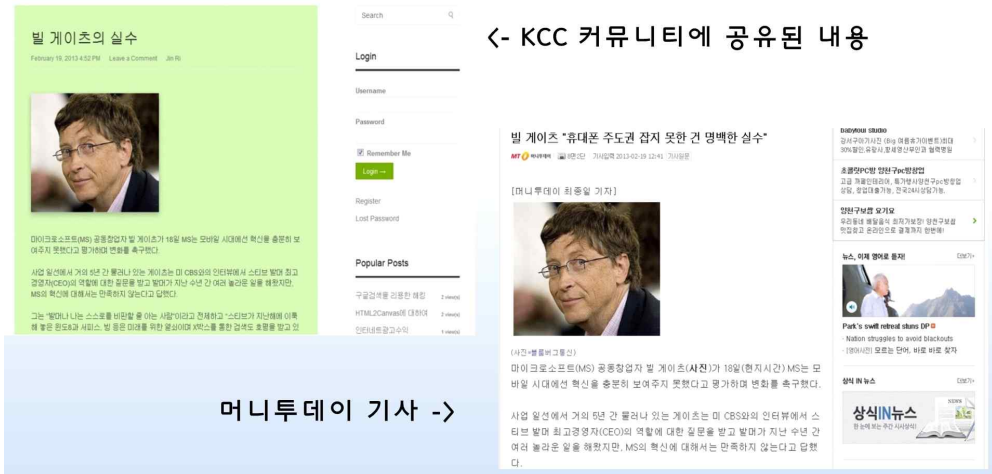
2015년 5월 평양기계종합대학이 3차원인쇄기술 즉 3D 프린터를 선보였다. 북한 연구진들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컴퓨터지원제작(CAM), 수자조종기술(CNC), 레이저기술, 재료기술 등이 일체화했다. 2016년 3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들이 레이저 3D 프린터를 개발했다. 그해 10월에는 북한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미용외과가 3D 프린터를 의료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2018년 11월 18일 NK경제 기사

13) 2018년 11월 2일 노동신문 기사

이와 같이 북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단순 IT 하청을 넘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동남아, 인도, 유럽, 러시아 등에 IT 개발자들을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고 사업도 진행해왔다. 북한은 IT 강국인 인도에 학생,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조선컴퓨터센터(KCC) 인도지부도 만들어 운영했다. 40여명의 학생, 기술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했다.¹⁴⁾



<사진7> 북한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 공유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관한 기사

그들의 활동을 보면 단순 노동 방식의 IT 개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개발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게임 등을 만들어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실제로 해외에 개발자 플랫폼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개발자들은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Stay hungry, Stay foolish'로 유명한 스탠포드대학교 연설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의 기사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2011년 8월 24일 병으로 인해 Apple CEO 자리를 떠난 Steve Jobs가 2005년 Stanford 대학 졸업식에서 초창기 연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실것을 권합니다.



<사진8> 북한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 공유한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의 스탠포드대학교 연설 영상

14) 2013년 8월 30일 NKICT 기사

당시 개발자들은 해외 정보를 습득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자신들의 조국 즉 북한을 위한 길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개발자들이 보인 행태는 단순히 하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창업자, 사장, 프로젝트 관리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시도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남북이 IT 교류 협력을 했다. 당시에는 주로 남한이 주문하는 기능을 북한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하청 형태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그것마저도 단절됐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상황과 시각이 변했다. 글로벌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2016년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한 북한 IT 기업 조선엑스포는 증권 솔루션, 온라인 게임, 빅데이터 솔루션, 전자책 솔루션 등 다양한 IT 상품을 판매하며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IT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적인 요소 즉 마케팅, 기획,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금융 등의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도 KCC 지부의 경우도 기술이 있음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인도 IT 기업들과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요구사항과 남한의 강점, 경험을 결합할 수 있다. 남한이 마케팅, 기획, 비즈니스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북한이 아이디어와 IT 개발을 하는 것이다. DMZ 등 중립지대에 실리콘밸리 같은 단지를 조성해 남북이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다. 남한의 벤처캐피탈이 북한 IT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게 할 수 있다.

과거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은 의류, 생활용품 등 제조업이 중심이었다. 이제는 북한도 지식경제산업, 첨단산업 육성을 원하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이미 북한이 많은 인재를 양성해 놓은 상태다. 즉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경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IT는 그런 요구에 적합한 분야다.

이와 함께 북한은 IT를 통해 산업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즉 북한은 IT를 각 산업에 접목하고자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은 9월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 된 첨단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해 과학기술을 앞세워 나가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경제 강국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생산력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¹⁵⁾

남한은 농업, 제조, 유통, 건설 등 다방면에 IT 기술을 접목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은 산업 역량을 끌어올리고 남한의 IT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이같이 경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사이 자연스럽게 교류 협력도 이뤄질 것이다. 경제공동체 건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튼튼한 성벽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결합이 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IV. 남북 IT 소통, 협력의 한계와 과제

남북이 IT를 통해 화해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때 걸림돌도 있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두 가지 시선이 융합된 후 상황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달

라지기도 한다.

각종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거론되면서 북한 IT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2013년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의 배후로 북한이 지적되고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해커가 약 7000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¹⁶⁾

WANTED BY THE FBI	
PARK JIN HYOK	
Conspiracy to Commit Wire Fraud; Conspiracy to Commit Computer-Related Fraud (Computer Intrusion)	
	
DESCRIPTION	
Aliases: Pak Jin Hek, Jin Hyok Park	Hair: Black
Place of Bir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Sex: Male
Eyes: Brown	Languages: English, Korean
Race: Asian	
REMARKS	
Park attended the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in Pyongyang, North Korea. He is a North Korean citizen last known to be in North Korea. Park has traveled to China in the past and conducted legitimate IT work under the front company "Chosun Expo" or the Korean Expo Joint Venture in addition to activities conducted on behalf of North Korea's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CAUTION	
Park Jin Hyok is allegedly a North Korean computer programmer who is part of a state-sponsored hacking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ome of the costliest computer intrusions in history, including the cyber attack on Sony Pictures Entertainment, a series of attacks targeting banks across the world that collectively attempted to steal more than one billion dollars, and the WannaCry ransomware attack that affected tens of thousands of computer systems across the globe.	
Park was alleged to be a participant in a wide-ranging criminal conspiracy undertaken by a group of hackers employed by a company that was opera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front company - Chosun Expo Joint Venture, also known as Korea Expo Joint Venture - was affiliated with Lab 110, on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hacking organizations. That hacking group is what some private cybersecurity researchers have labeled the "Lazarus Group." On June 8, 2018, a federal arrest warrant was issued for Park Jin Hyok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fter he was charged with one count of conspiracy to commit wire fraud and one count of conspiracy to commit computer-related fraud (computer intrusion).	
If you have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is person, please contact your local FBI office or the nearest American Embassy or Consulate.	
Field Office: Los Angeles	

<사진9>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수백한 북한 해커 모습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9월 북한 해커와 그가 속한 조선엑스포 등을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FBI는 2014년 11월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가 그들이었다는 것이다.¹⁷⁾ 2014년 소니픽처스는 북한 지도자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했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한다는 의혹도 있다.

북한의 이같은 사이버범죄 의혹은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컴퓨터 등 IT기기는 물론 윈도 운영체제(OS) 같은 기초적인 소프트웨어(SW) 수출도 금지돼 있다. 즉 북한의 해킹 의혹은 IT 교류에 가장 크고 현실적인 문제다.

북한은 해킹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해킹을 하고 있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남한 정부뿐 아니라 미국, 영국 정부는 물론 해외 보안 기업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에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해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 과학기술대학교가 북한 사이버부대 양성소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¹⁸⁾ 평양 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북한의 해킹 의혹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북한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

15) 2018년 10월 11일 NK경제 기사

16) 2016년 3월 8일 MBC 기사

17) 2018년 9월 7일 연합뉴스, 뉴스1 기사

18) 2015년 11월 26일 연합뉴스 기사

그러나 북한을 해킹 국가로만 보는 것 또한 극단적인 생각이다. 빛과 어둠은 어느 분야에나 있다. 해커 역시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오늘의 개발자가 내일의 해커가 될 수 있고, 오늘의 해커가 내일의 개발자가 될 수 있다.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모든 IT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 IT와 관련된 문제는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다. 남한이 북한과 SW를 개발했을 때 그 안에 해킹 코드를 넣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IT 개발자들이 모두 음지에서 해커로 활동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남북은 4.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영역은 지상, 해상, 공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확대해 사이버공간에서도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정부와 IT 기관들이 사이버안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남북 개발자들이 사이버안전 서약을 통해 해킹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다.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남북 또는 남북과 제3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남북이 공동 IT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별로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픈소스 활용과 표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은 IT 제재로 인해 SW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가 공개된 것이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붉은별 운영체제(OS)도 오픈소스 리눅스 기반이다. 북한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분야 등에서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

이를 감안해 남북이 IT 교류협력을 할 때 오픈소스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스코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킹 코드를 넣기 어렵다. 협력, 개발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남북 IT 협력을 위해 정부가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해서 음지에서 암암리에 협력이 진행되면 오히려 불신을 줄 수 있다. IT 표준화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신뢰를 쌓을 수 있다. 표준화 논의로 북한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IT 체계로 끌어들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IT를 통한 화해협력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북한의 IT 기술이 남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보는 선입관이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IT 환경만 생각해 일방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남한이 북한에 IT 하청을 주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고 시각도 있다.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테스트베드의 관점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퀀텀점프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지원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독자적으로 IT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남과 북이 동등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의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북한의 IT 실태와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해법이다. 남북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폐쇄적인 IT 환경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제재 상황에서 IT를 발전시키다보니 갈라파고스처럼 독특한 방식으로 IT가 발전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추진해온 프로젝트와 남한의 프로젝트를 맞추는 것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 수 있다.

또 북한은 스마트폰, PC 검열 등을 하고 있다.¹⁹⁾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체제 비판과 외부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 컴퓨터의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저장 내용, 통화, 문자 내역 등을 북한 당국이 원할 때 점검하고 있다. 북한 스마트폰, 태블릿PC로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고 누구와 통화를 하고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사용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런 검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IT 기술을 의심하고 활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 또 이런 검열은 자유로운 소통과 아이디어 창출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때문에 점차 북한 당국이 폐쇄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의지와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남한이 당근을 제시하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V. 맺음말

남북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된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대립해 왔다. 이로 인해 언어, 문화, 사회, 경제적인 이질감이 증폭되고 있다. IT 기술은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있다. 특히 향후 통일의 주역이 될 10~20대 남북 청년들의 IT에 대한 호감에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남북 소통을 더 활발히 하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 단순히 IT 기술 자체를 교류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와 IT, 역사와 IT, 사회와 IT 등을 융합해서 소통, 교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IT는 타 분야에 비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남북의 젊은 세대들이 IT로 경제 협력에 나서 공동으로 창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경제의 융합이 이뤄질 수 있다.

IT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협력 과정에는 불신과 우려도 나올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방형(오픈소스) 연구와 협력,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소스코드와 설계, 기획안을 투명하게 공유해 북한 IT 기술의 신뢰성,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한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북한 측에 설명하고 상호 사이버안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동 조사 또는 상대방에 조사를 요구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남한은 북한 IT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그들을 이용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은 북한 IT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

IT는 남북 소통과 평화 체계 구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오히려 IT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간과한다면 통일비용이 증가하고 남북 사회, 경제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T는 단순히 IT 분야 전문가들이나 IT기관,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교육, 문화, 사회, 보건 등 다방면에 IT가 녹아들었다. 때문에 분야별, 기관별로 화해협력을 추진할 때 도구로 고려돼야 한다.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IT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때그때 적합한 서비스와 기술을 지원한다면 남북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1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8'

첫 단계로 우선 북한의 IT 실태와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 화해협력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또 경제적 협력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남북 IT 소통과 협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남한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칫 제재 문제나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IT 협력 과정과 과제,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참고자료

- * ‘북한식’ 정보화에 관한 연구 : 정보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박문우,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년
-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 2018년 9월 25일 NK경제 기사
- * 2018년 9월 3일 NK경제 기사
- * 2018년 7월 2일 NK경제 기사
- * 이정진,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년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
- * 2018년 8월 6일 오마이뉴스 기사
- * 2015년 10월 13일 뉴스1 기사
- * 2018년 6월 7일 NK경제 기사
- * 2018년 8월 22일 NK경제 기사
- * 2018년 11월 21일 NK경제기사
- * 2018년 11월 18일 NK경제 기사
- * 2018년 11월 2일 노동신문 기사
- * 2013년 8월 30일 NKICT 기사
- * 2018년 10월 11일 NK경제 기사
- * 2016년 3월 8일 MBC 기사
- * 2018년 9월 7일 연합뉴스, 뉴스1 기사
- * 2015년 11월 26일 연합뉴스 기사
-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8’

저자 약력 강진규 maddog@nkeconomy.com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졸업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 과정

디지털타임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MTN) 테크앰 기자

NK경제 대표/기자

- 끝 -